

갈등 줄이게…이혼소장 객관식으로 바꾼다

광주가정법원 체크방식으로 변경…10월부터 시행

대립구도 조기 개입으로 조정성립률 증가 기대도

■. 얼마전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아내의 이혼소장을 받은 A(45)씨는 깜짝 놀랐다. 어쩌다 한 번 한 일, 철 없던 신혼 초의 일까지도 들춰가면서 원래부터 나쁜 사람인 것처럼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분노가 치민 A씨는 즉시 아내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조목조목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답편서를 제출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아내에게 어린 아이들을 도저히 맡길 수 없다며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아내 역시 아이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충술서를 제출했다. 아이들의 진술서를 전달 받은 A씨는 속이 뒤집혀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재판 당일 양가 식구들은 법정 밖에서 살풍경을 연출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이혼소송을 통해 점점 확대

돼 자녀와 양가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광주가정법원이 이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혼소장을 객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장 양식을 사건 기술 방식이 아닌 객관식 체크(V) 방식으로 바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광주가정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혼사건 조기 개입 모델’을 개발,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모델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이 시범 시행한 것으로, 조정성립률이 9% 증가하는 등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정법원은 서울의 모델을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갈등저감형 소장양식의 도입’, ‘조기 변론준비기일과 즉일조사’, ‘맞춤형 개입 실시’ 등이다.

갈등저감형 소장 양식은 이혼 사유를 미리 유형화한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다. 답변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시가/처가문제 □중독문제 □경제문제 □성격차이 □성생활문제 □건강문제 □종교갈등 □자녀학대 등에 체크(V) 하는 것이다.

또 엄숙하고 딱딱한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법관과 당사자가 편안한 분위기 속 조기에 직접 만나 당사자의 현재 상태와 요구를 파악한다.

당사자들만의 힘으로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와 현재 생활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심리학과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가사조사관이 재판 당일 즉일 조사를 실시한다.

재판장은 조사 결과를 참조해 각 사건에 맞춰 전문가 상담이나 면접교섭캠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비나 면접 교섭, 접근 금지에 관한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광주가정법원은 조기 개입 모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이날 오후 정사 중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번호사회·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초청, 갈등저감형 소장 양식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현수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는 “현재 이혼소송은 승패를 정하는 대립당사자 구조여서 이혼하더라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자녀의 양육비·면접교섭 등에서 후폭풍을 겪게 된다”며 “이혼율을 줄일 수 있다면 ‘바른 이혼’을 유도해 이혼 이후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개입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나눔 적십자 바자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1일 광주은행 본점 현관 인근에서 ‘사랑나눔 2016 적십자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에서 모금한 기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조손가정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교통사망사고 9~12월 40% 집중

경찰, 수하여행·산악회 버스 음주 단속 강화 등 대책 수립

광주지역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40%가 초가을부터 연말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돼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3년 광주지역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의 39.2%가 9~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3년 110명, 2014년 101명, 지난해 95명 등 3년간 306명(연평균 10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9~12월까지 4개월에 연평균 40명(3년간

12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는 1년을 4개월씩 3구간으로 나눌 경우 같은 기간 평균보다 5~6%가량 높은 수치다.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사고도 지난 2013년 63명, 2014년 57명, 지난해 49명 등 169명(연평균 56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9~12월 숨진 보행자가 총 67명(39%)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초가을부터 연말까지 1년 교통사망사고의 40%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운

전자 및 보행자 안전의식 저하, 외부 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가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여행 및 산악회 출발시간을 사전에 파악해 불시 음주측정에 나서고 안전띠 미착용, 관광버스 차내 소란행위, 지정차로 위반, 관광버스 대열운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론차(오토바이) 인도 주행, 악성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대형차 난폭·보복 운전 예방을 위해 순찰인력을 늘리고, 음주단속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동식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장실서 은밀한 환전

불법 게임장 3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일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압구 김모(5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북구 운암시장 인근 상가에 일명 ‘불타는 불새’ 게임기 11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치구에서 ‘일반 게임 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뒤 게임장 외부 화장실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도시 투자 고수익 미끼

13억대 사기 30대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염모(3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염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신도시 아파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42차례에 걸쳐 13억 3000만원을 받아 쟁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가정주부로 돈을 벌러거나 대출까지 받아 적게는 1회 3000만원, 많게는 11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까지 투자했다.

염씨는 주식투자자로 인한 손실금 11억원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고, 투자금은 주식투자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죄 선고하지만 부끄러움 없는지…”

세월호 관련 홍가혜씨 항소심서 재판장 일침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오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여·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직후였다.

판결은 무죄로 끝났지만 홍씨는 법정 에 남아 검찰에 할말이 있다며 검찰의 ‘모욕죄 고소 낱발 처벌’에 대해 따지면서 일이 벌어졌다. 홍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판장이 “조용하라”고 명령했지만 홍씨는 아랑곳않고 언성을 높였다. 급기야 재판장은 법정모독죄를 거론하며 무죄 선고 이면을 밝혔다.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적인 혼란때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분명 잘못하다는 취지였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현영)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

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18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바·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라고 언급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교사 실내화만 흡친 이유가…

“냄새 맡으려고”… 광주북부경찰 ‘신발 뱀태’ 입건

“여성들의 신발만 보면 흥분돼요.” 박모(33)씨는 지난 7월28일 아침까지 지인과 거나하게 술을 먹고도 나자 갑자기 그 냄새가 그렸다. 술 기운은 박씨를 흔들리게 했다. 광주에서 담양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던 박씨는 결국 행선지를 집이 아닌 북구의 한 초등학교로 정했다.

택시에서 내린 같은 날 오전 7시15분께 박씨는 초등학교 현관 신발보관함에 서 교사들의 실내화 7켤레(50만원 상당)를 훔쳐 교문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집으로 온 박씨는 성적 패갑을 느끼기 위해 흡친 실내화를 꺼내 바라보거나 냄새를 맡았다.

1일 광주북부경찰은 박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흡친 여성들의 실내화를 꺼내 냄새를 맡으면 흥분됐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흡친 실내화 중에는 남성 교사의 실내화도 있었는데, 박씨는 “급하

게 흡진느라 실수로 들고 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여성들의 신발 냄새에 집착하는 병적 증세를 보였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여성들의 신발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박씨의 동종전과는 모두 8건. 3년 전에는 신발을 훔쳐 철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신발에 집착해 지저는 범죄로 이는 정신질환이다’는 내용의 판결로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범죄인 줄은 알지만 술에 취해 자제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주로 인천에서 여고생에게 양말을 반강제적으로 사들여 냄새를 맡는 등의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이행유에 2년과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을 받고 풀려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길에서 자던 취객에 접근 손가방 쟁겨 출렁랑친 30대녀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져 자던 60대 남성에 접근해 손가방을 쥔 채 달려나온 30대 여성이 속칭 ‘아리랑치기’ 혐의로 경찰에 들렸다.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주부 A(31)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인도에서 쓰러져 잠자고 있던 사업가 B(63)씨에게 상

태를 묻는 척 접근해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손가방을 쥔 채 달려나왔다.

○…A씨는 술에서 깨어난 B씨가 현금 340만원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한 뒤 10일여만에 검거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남편을 마중나왔다가 길에 취객이 쓰러져있고 가방이 있기에 순간 욕심이 났다”면서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23695	1	광산구 장수동 532 2237㎡	답	194,619,000 194,619,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타경 2527	1	광산구 양동 산26 16661㎡	임야	266,576,000 266,576,000	분묘소재, 맹지, 지척경계불명
2016타경 3711	1	영광군 군남면 도장리 498-1 1983㎡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1,416,400 21,416,400	분묘7기소재, 맹지, 지척경계불명, 수목포함매각
2016타경 4035	1	동구 산수동 21-18 44㎡ [추명호2분의1지분전부]	도로	3,740,000 3,74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산96 32054㎡ [추명호3분의1지분전부, 분묘소재]	임야	42,740,000 42,74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3	담양군 무정면 덕곡리 165-31 170㎡ [추명호2분의1지분전부]	답	9,841,800 9,841,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동소 165-30 87㎡ [추명호2분의1지분전부]	답		독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6타경 4332	2	동소 165-13 249㎡ [추명호2분의1지분전부]	답		분묘소재,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동소 165-12 421㎡ [추명호2분의1지분전부]	답		분묘소재,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동소 165-12 421㎡ [추명호2분의1지분전부]	답		분묘소재,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6타경 4448	1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62 1359㎡	전	19,026,000 19,026,000	분묘소재,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584-5 496㎡	전	6,448,000 6,448,000	분묘소재,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4448	1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355-1 538㎡	제외지	32,280,000 32,280,000	매각제외제외지인
		창고 88.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물임용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비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5타경 23695	1	광산구 도산동 954-1 135㎡ [현황일부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지속]	대	55,408,000	일괄매각, 제외지 포함, 수목포함
		광산구 상도산길59번길 21 41.65㎡ 부속건물 1.65㎡ 제외지 통로 등 19㎡	단독주택	55,408,000	
2016타경 4141	1	북구 용봉동 10-39 119㎡	대	88,661,540	일괄매각, 제외지 포함
		북구 효산로6번길 15-6 1층65.88㎡ 2층54.11㎡ 부속3.0㎡ [광] 제외지 세면장 등 14.9㎡	단독주택	88,661,540	
[아파트]					
2016타경 3131	1	북구 문흥동 1011-2 101동 8층 806호 49.9㎡	아파트	107,000,000	
		5㎡		107,000,0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6타경 3582	1	북구 신안동 353-1 249㎡	대	858,028,000	일괄매각, 제외지 포함, 묵묵3층 재주차장으로이용중
		북구 서양대로90번길 9 1층40.67㎡ 2-4층 각 165.95㎡ 5층 129.35㎡ 6층 102.62㎡ 지하층 164.53㎡ 제외지 가차 등 149.3㎡	휴게음식점, 여관	858,028,000	
2016타경 8631	1	북구 신안동 353-18 140㎡ [현황주차장]	답	5,000,000	분묘장소:광주남구 송암로 124번길3층 하동송원주차장
		사동봉거지:나주시 대동2길 20[이정동] 등 특번호:91구3066 차형:택티언소프트 연식:2007	자동차	5,000,000	
[자동차, 중기]					
2016타경 2527	2	동구 선교동 451-2 13㎡	도로	5,940,000	일괄매각
		동소 451-4 66㎡	도로	5,94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면적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고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9. 19.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9. 26.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가입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을 무효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가매각의 1회[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약계약을 체결한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 각자의 자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행위의 책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실시하여 최고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자율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항상 매각결정일자 확정일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을 확정일 날로부터 3개월, 대금지급기한 지정된 날의 3월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일의 지연이나,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여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본상의 지상권자세를 납부한 후 등본상매수입찰인서 및 등본상수입찰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과달행변호를 기한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합니다.
③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하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등권설정일과 매각일과 거주하고 있는 일치인이나, 사법 자문작성을 마친 일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입찰인도인 및 설정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일 이후 주된 등권설정(매각결정일자, 현물조서보고서 및 등기부의 사본)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일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장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는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허가되거나 집행이 취소, 경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도 해당되는 물건이며, 출생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일자에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전하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 민형사(경매보통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의 제과하도록 하여지지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연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나,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미루어 매각결과가 상이하다 함고, 대금지급확정이나 승낙해상, 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인도에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바치된 매각결정일자에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영수